



쟁  
점  
토  
론

# 한국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어제와 오늘

정 일 준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허와 실

시절에 따라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해 왔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때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기술관료의 역할과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양방향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5공화국 시절에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대학교수상이 대두되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학교수는 그 모습을 달리했다.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현 정권 안에서 대학교수는 또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상 권력과 지식은 상호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상호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회참여 문제는 사회참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참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 I. 대학교수 사회참여 형태의 변천

2003년 초 미국에서 막 귀국했을 때의 일이다. 기존 제도권학회에 비판적인 진보적 연구자들이 모여 1980년대 중반에 결성한 학회의 워크숍에 참석했다. 귀국인사 겸 들른 그 자리에서 “이제 지식인은 바깥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여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다른 학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상전벽해였다. 정말 권력이동이 일어났는가?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

으로 어제의 피억압자가 억압자가 되는 수직적 정권교체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어제의 '비판적, 진보적 지식인'이 어떻게 오늘 '정권참여'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크게는 한국의 자본주의적 사회체제 전체를, 작게는 한국정치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형시키겠다고던 열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는가? 이제 '진보적 지식인'은 정권에 참여하여 자신이 꿈꾸어 오던 기획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가? 이제 비판사회과학은 지배사회과학으로 탈바꿈해야 하는가? 웬지 낯설었다. 모든 정파와 지식인 집단이 올인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치열한 세력 결과 권력-지식의 이합집산을 제대로 목도하지 못한 나 자신의 불찰이리

라.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시대착오일 것이다. 한국현대사에서 권력-지식 관계(power-knowledge nexus)의 한 사이클이 지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 II.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지식 관계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일어난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민간권위주의 정권 12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인출신 대통령의 30여년에 걸친 군사권위주의 정권을 겪었다. 1960년 4·19학생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으로 대부분 기억한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하야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며 들고 일어난 대학교수들의 4·26시위였다. 해방공간에서의 극심한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을 통한 동족상잔을 목도하고서 1950년대 내내 지식인 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1960년 4월혁명을 계기로 '예비 지식인'인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현실 참여가 활발해진다.

5·16군사쿠데타는,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4월혁명을 전후하여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많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당대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思想界』조차 쿠데타 초기에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를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근대화 인텔리겐차'를 필요로 했다. 1950년대 지식인들이 현실도피와 현실참여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이제 1960년대 들어 지식인들은 정권참여와 정권비판 사이에서 분열과 긴장을 더해갔다. 위로부터의 급속한 따라잡기식

(catch up)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 많은 대학교수를 동원했다. 당시 정권에 참여한 대학교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제관료를 비롯한 전문 기술 분야의 기술관료(technocrat)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그(ideologue)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성격이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강조점이 이동함에 따라 국가는 많은 기술관료를 필요로 했으며 대학교수는 가용한 인재풀을 제공했다.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지식인들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해 갔다. 비판적 지식인 집단은 한일회담 반대 투쟁, 월남전 파병 반대 투쟁,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 3선개헌 반대 투쟁 등을 거치며 서서히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었다. 당시 대학교수는 다른 인구층에 비해서 가장 비판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집단이었다. 따라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라 말로 대학교수의 본분이라고 여겼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로 대변되는 1970년대에 기능적 지식인 즉 기술관료는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델은 아니었다. 실제로 근대화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이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판적 지식인상이 우세했다. 정권에 참여한 교수를 '어용교수'라 질타하는 진통이 바로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권력이 점차 독재화되어 가고,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폐해가 누적되면서 지식인들은 권력감시와 비판이라는 역할을 넘어 생산과정에서 착취받는 민중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게 되었다. '권력의 시녀' 이기를 거부하고 '민중의 교사'도 아니면서 지식인이 어떻게 민중과 정치적으로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10·26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또 다른 12·12 군사쿠데타에 뒤이어 신군부에 의

한 5공정권이 들어섰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책에 대한 지식인의 참여를 정당화하거나 독려하는 방향의 '참여지식인상'을 활발하게 제시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직접 참여한 대학교수들은 당시 지식인 사이에 팽배해 있던 '어용교수'론을 비판하면서 지식인이 국가발전을 위해 지식과 이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상은 대학교수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은 지식인과 대학생들을 순치시키고자 했다. 졸업정원제를 통해 대학입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다른 한편 대학캠퍼스 안에 공권력을 주둔시키고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감시했다.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예비지식인이나 엘리트로 생각하기보다 민중의 일부로 여겼다. 대학출신 진보적 지식인들이 노동현장에 직접 투신하여 활동가로 거듭 나고자 했다. 1980년 광주학살의 경험은 대학가를 이념적으로 급진화시켰다. 1980년대 대학가에는 단순히 '비판적 지식인'을 넘어 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지식인'이 대두했다. 비판적 지식인은 싫건 좋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보적 지식인은 달랐다. 해방 후 한국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공유했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나아가 조국근대화라는 기치아래 추진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즉, 혁명을 꿈꿨던 것이다.

### Ⅲ. 민주화 이후 권력-지식 관계의 변천

1987년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급진화된 진보적 지식인의 이념과 대오에 균열을 가져왔다.

일부는 일정 정도 민주화된 정치권에 들어가 권력에 참여하여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일부는 여전히 권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본의 운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고자 했다.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체제변혁적인 운동을 추구했다. 민주화 이후 지식인의 현실참여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대의를 추구하는 단일대오가 아니었다. 사회적 모순이나 사회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제 과거처럼 보수적(기능적)-진보적, 어용적-저항적, 체제동조적-체제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이분법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는 국내외로 급격한 정치경제지형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국내에서는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출범했다. 1993년에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어 1998년에 최초로 선거를 통하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밖으로는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WTO 및 OECD에 가입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렇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체제'의 관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다.

문민정부를 자임한 김영삼 정부와 국민의 정부라 지칭한 김대중 정부에서의 권력-지식 관계는 사뭇 달랐다. 30여 년에 걸친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이 항상적인 정당성 결핍에 시달렸다면, 이들 민간민주정부는 달랐다. 적어도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군사정권 아래서 저항하고 탄압받던 지식인 중 여럿이 떳떳하게 정권에 참여했다. 이제 정권에 참여하는 일이 더 이상 '어용교수' 시비에 휘말리는 빌미가 되지 않는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중적 지식인' 론으로 유명한 한완상 교수가 통일부장관으로 입각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증했는데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지식인들이 대거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참여의 길에 나섰다.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은 1980년대의 '변혁지향적인 민중운동' 과 차별화되면서 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교수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간과하면 안 될 사항은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의 도전이다. 1960, 1970년대의 지식인의 역할이 주로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설정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경제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권력-지식 관계의 대립축은 국내외 자본블록 대 한국의 국가 및 지식인 연합간의 긴장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민주화, 지구화와 결합된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권력-지식 관계의 변형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지식인, 특히 대학교수는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특권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IMF위기는 이러한 지식인상이 허구였음을 여실히 폭로했다. 대학교수도 다른 여타 제도나 조직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좁은 전공 영역에 매몰된 전문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총체적, 진보적 지식인상은 사라졌고 더불어 대학교수의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위상도 격하되었다. 사회전체를 조망하는 총체적 시각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관찰하고 서로 소통하는 길 뿐이다. 이러한 공적담론,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대학이라는 제도적 장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공적

담론은 인터넷이나 시민운동단체들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식인이고자 한다면 정치권력과 경제자본뿐 아니라 매체권력 그리고 사회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 IV. 참여정부의 권력-지식 관계

참여정부는 민주화와 지구화, 그리고 정보화의 흐름이 매우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탄생했다. 국가권력이 위에서 호명해서 금력으로 끌어모으던 대중의 동원정치시대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시민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의 참여정치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인다. 참여정부는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싸우면서 선홍빛 저항의 기억을 간직한 '386세대' 와 붉은 악마, 촛불시위 등을 통해 흥겨운 직접참여의 추억을 간직한 '2030세대' 의 뜨거운 성원 아래 탄생했다. 물론 이들 젊은 세대 외에도 광범한 중산층과 노동계급 그리고 고른 지역별 지지가 참여정권 출범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환호는 쉽게 야유로 변한다. 정권창출과 정권유지는 별개이다. 예로부터 창업과 수성은 전혀 다른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요구했다. 싸울 때 쓰는 칼과 요리할 때 쓰는 칼은 다른 법이다. 투표를 통해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이들의 열망이나, 참여정부의 탄생을 반대 당에서 바라봐야 했던 이들의 실망은 모두 참여정부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이라는 제도적 한계는 최고 권력 담당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번민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인 국익이나 단기국익이나, 통일 이후까지를 전망하는 대북정책이나 현안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이나, 지지자를

위한 정책이나 반대파까지 아우른 국민 일반을 위한 정책이나, 개혁적인 정책추진이나 타협적인 정책추진이나 등등 탄핵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 개혁의제를 일사불란하게 밀고나가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 참여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를 두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위원회에 많은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인력들이 반드시 정권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단체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실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어찌 보면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인재등용에 대해 '코드인사' 나 '둘러막기식 인사' 나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수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정권참여 나아가 사회참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화 이전 대학교수의 사회참여란 주로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의미했다. 민주화 이후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범위는 급격히 확장되었지만 이에 반비례해서 영향력은 대폭 감소했다. 대학은 사회와 분리된 섬이 아니다. 대학이 속한 국가 및 시민사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은 차세대의 인재를 길러낼 뿐 아니라 교양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처럼 자원이라는 인적자본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국가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지식인'으로 인식되고,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총체적 지식인'의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학교수가 제도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탁월함이나 참여욕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도로서의 정치나 관료기구 그리고 시민운동단체가 아직도 저발전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대학교수의 사회참여에는 정권에 참여하는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 정권의 반대편인 야당 또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자와 후자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너도나도 정권 비판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아래서라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심지어 이처럼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정권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좀처럼 수긍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배경이나 이해관계가 어떠한 간에 결국 그것도 정상적인 통치과정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말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몫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아래서 정치게임을 한다. 항상 내가 다수를 대변한다는 믿음은 위험하다. 당신은 항상 소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하다. 민주화는 입장전도를 낳았다. 과거 비판받던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 선다. 과거 비판하던 사람은 이제 비판받는 입장이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는 하되, 최종 심판은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던 시민 다중이 한다. 결국 문제는 '어떤 정파가 실현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소통에 부쳐 검증받느냐' 이다. 대학교

수도 다른 지식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직간접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회참여 여부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참여'냐가 문제다.

'한국호'는 비록 민주적으로 선장을 바꾸었지만 지구화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다. 문제는 그 '한국호'가 더 이상 큰 배 한 척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계급계층적인 위치에 따라 크고 작은 배로 나뉘고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국민은 뗏목에 갇힌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처럼 '조국의 운명이 곧 내 운명' 이거나 '조국의 생존이라는 큰 자유 앞에 개인의 작은 자유를 유보'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권력 비판은 대세다. 권력 비판(voice)을 널리 수용하지 않으면 급격한 이탈(exit)을 초래할 것이다. 권력 담당자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해 나간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내부의 저항이 정도 이상이라는 변명도 부족하다. 권력의 통치기획은 반드시 비판이라는 저항을 초래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가진 정권이기에 때문에 비판에 면역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은 결국 신체가 얼마나 건강한 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피로가 쌓이고 몸 상태가 나빠지면 과거에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던 사소한 바이러스도 큰 병을 유발하는 법이다.

지식이 없는 권력이나, 권력이 없는 지식은 둘 다 무용하거나 불완전하다. 권력과 지식은 상호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서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해로 접어드는 참여정부의 권력-지식 관계가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거버넌스(governing governance)라는 성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직접적인 정권참여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지식인의 주요 일원인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방법이다. 그렇지만 대학교수가 권력-지식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론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 작업을 수행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당파적 지식인을 넘어 소통을 추구하며 전환계를 제시하는 지식인상이 아쉽다. 대학교수

#### 정일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였고 워싱턴대학교 파견교수, 하버드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부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한국 지식인의 대일인식과 한일회담』, 『지구시대 한미관계와 한국민족주의, 전쟁과 근대화 : 한국과 남베트남 비교 1961~65』, 『4·19와 6·3사회운동의 비교연구 : 한국사회변동과 미국의 개입』 등 다수가 있다.